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07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주요내용

주 제 :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자 :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일 시 : 2015년 11월 26일 오전 7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요약 >

☛ 11월 26일 207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는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정치는 최소한 가치를 나누는 것으로 결정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성, 공익에 대한 가치가 중시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정하자는 취지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에 실패했다.

■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당파적으로 구성되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위원으로 선정은 됐지만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 대리인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선거구획정위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선거구획정위는 첫 번째 시한인 2015년 10월 13일을 지키지 못 했다. 두 번째 시한은 11월 13일로 10월 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 안을 법으로 확정지어야 하는 기한이다. 예정대로라면 11월 13일에 이미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한이 지나고, 다섯 번째 시한인 2월 13일쯤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선거구획정위는 기술적인 위원회로 몇 가지 획정 기준이 필요하다. 전체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그리고 시, 군 자치구에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자치구의 일부를 떼어내서 다른 자치구에 붙일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것이 문제다. 만약 인구가 부족한 자치구에 인접

한 자치구의 동을 붙이지 않고 떨어져있는 동을 붙이게 된다면 게리 맨더링이 된다. 따라서 이를 국회에서 정해줘야 한다.

■ 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역대 선거구 획정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2달 전해야 가까스로 선거구가 확정됐다.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에 관행으로 형성된 것 같다. '예비후보제'가 도입되어 12월 15일이 되면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면 기존 법적 선거구가 전부 무효가 되고, 모든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원 자격으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불공평한 게임이 된다.

■ 우리나라의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정해야 한다. 첫 번째 의원 정수를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매년 새로 정하고 있다. 한 번 정하게 되면 10~20년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의원 정수가 정해지면 권역별 의석수,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을 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선거구 획정기간을 정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10년마다, 영국은 8~12년, 호주는 7년마다 한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때마다 획정을 한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획정 기간과 시한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선거구획정위를 정치적으로 완벽히 중립화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정당별 추천으로 구성되는 것보다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중립화가 가능할 수 있다.

■ 당의 대리인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 모양만 독립기구 : 선거구 획정은 2월 13일 즈음에 확정될 가능성 커

- 정치란 최소한 가치를 나누는 결정을 의미한다. 정치학자 D. Easton은 '사회적 최소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 했고, H. Lasswell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획득하는가'라고 정의하였다. 최소한 가치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정치는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어서 공공성과 공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특정 사람들, 특정 그룹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구성됐다. 이해당사자가 확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정하자는 취지였다. 이전에는 국회에서 구성됐다. 선거구획정위는 민간인도 참여했지만 대체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추천을 받아 구성이 됐지만, 각 주요 정당에서 어느 정도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선거구가 확정됐다.

- 하지만 선거구 획정에 실패했다. 첫 번째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2015

년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획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획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마감하라고 한 것은 2014년 10월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가 정치개혁안을 낸 것이 2015년 2월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가 국회에 구성된 것이 2015년 3월이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첫 번째 시한인 2015년 10월 13일을 지키지 못 했다. 두 번째 시한은 지난 11월 13일이다. 이는 10월 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 안을 법으로 확정지어야 하는 기한이다. 예정대로라면 11월 13일에 이미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한이 지나고, 다섯 번째 시한인 2월 13일쯤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선거구획정위는 246개 현재 지역구 수대로 유지하되, 도시지역에서 증설될 지역구를 최소화하면서 두 개 정도의 지역구가 남았다. ‘와일드 카드’라 불리는 두 개의 선거구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 합의가 안 되어 시한을 넘기고 있다. 한쪽에서는 경북+강원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북+호남을 주장했다. 즉, 어느 쪽이 하나 더 많은 지역구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이다.

- 선거구획정위는 기술적인 위원회로 볼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몇 가지 확정 기준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전체 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를 국회에서 정해줘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총 정원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시·군 자치구에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중구의 인구는 10만 명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독자 선거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구를 유지시키려면 인구 하한선을 넘겨야 한다. 인근에 있는 성동구는 선거구가 갑, 을로 나뉘어져 있고, 몇 개 동을 빼내도 지역구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성동구의 몇 개 동을 빼서 중구에 붙이면 인구 하한선을 넘어, 단독 선거구가 될 수 있다. 자치구의 일부를 떼어내서 다른 자치구에 붙일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것이 문제다. 성동구의 어느 동을 떼려면 중구와 붙은 곳을 줘야 한다. 중구와 떨어진 엉뚱한 동을 붙이면 게리멘더링(선거 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된다. 선거구가 서로 붙어있지 않지만 한 선거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해줘야 한다.

- 국회에서는 정원 300명을 정했고, 나머지는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가 당파적으로 구성 되어있어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새누리당에서 4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 4명, 선거구획정위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 되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려면 9명 중 2/3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원장을 제외하면 한쪽 당에서 두 명이 전향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만약 위원장이 어느 쪽을 지지한다고 해도 5표 밖에 안돼서 1표가 부족하다. 어느 한 명이 전향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이 정당별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공정하게, 독립적인 기구로써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다. 결국은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위원으로 선정은 됐지만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대리인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선거구획정위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매번 바뀌는 선거구 획정, 기간, 시한 못 박아야 : 의원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획정기간 정해야

- 15대에서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것은 4월 중이었다.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50일 전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4월 9~15일 사이에 선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구가 획정된 날은 2~3월 중이다. 원래 6개월 전에 선거구가 획정이 되어야 했지만 2달 전에 선거구가 획정이 됐다. 미국의 경우 선거의 기준과 날짜, 방식 등은 2년 전에 획정이 된다. 모두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 물이 선거 훨씬 전에 정해지며,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가 임박해서 물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는 게임의 규칙을 경기 중에 바꾸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획정하더라도 그동안 선거구 획정이 제 날짜에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다.

[15~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일]

	선거구 획정 날짜	선거 일시
15대 국회의원	1996년 2월 6일	1996년 4월 11일
16대 국회의원	2000년 2월 16일	2000년 4월 13일
17대 국회의원	2004년 3월 12일	2004년 4월 15일
18대 국회의원	2008년 2월 29일	2008년 4월 9일
19대 국회의원	2012년 2월 29일	2012년 4월 11일

-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12월 31일까지 획정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다르게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17대 선거 때 처음으로 ‘예비후보제’가 도입되어 12월 15일이 되면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중구선거관리위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해야 명함을 돌릴 수 있고, 사무실도 내고, 후원회도 만들 수 있다. 예비후보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아무 활동을 할 수 없지만, 등록을 한다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기존과 다른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시한을 못 지키게 되면 기존 법적 선거구가 전부 무효가 되고 모든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정활동 일환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불공평한 게임이 된다.

- 우리나라의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정해야 한다. 첫 번째로 의원 정수를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매번 새로 정하고 있다. 한 번 정하면 10~20년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의원 정수가 정해지면 권역별 의석수를 정할 수 있다. 권역별 의석수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는 의원 정수를 정하고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도 확정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선거구 획정기간을 정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10년마다 한다. 영국은 8~12년, 호주는 7년마다 한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 때마다 획정을 한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획정 기간과 시한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의 위치나 권한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선거구획정위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정당별 추천방식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당별 거부권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당마다 4명씩 추천해서 구성하는 것보다 거부권을 뒤 안된다 사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가능한 중립화가 가능할 것이다. 완벽한 중립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권력관계에서 새로운 권력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켜줘야 한다. 다만, 반영시키지 않는 정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중립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7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12월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지, 또 12월 31일 이후에는 모든 후보자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이지요?

답변 12월 31일이 되면 예비후보 자격이 아예 없어지게 되므로 공탁금도 다 돌려줘야 한다. 왜냐하면 예비후보가 선거구별로 등록을 했지만, 모든 선거구가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인 후보들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비공식적으로 지하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서울 중구 선거구가 없어지면 중구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예비후보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 범법행위가 된다. 보통 246개 선거구니까 200개라고만 쳐도 5명 정도씩만 출마해도 1000명이 넘는다. 예비 후보가 전국적으로 1500~2000명이나 되어 상당한 사람들이 제약을 받게 된다.

질문2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은?

답변 학계는 대체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쪽이 많다. 대략 360명 정도 전후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참 많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우선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의원, 지역구 의원 중에서도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치열한 선거를 치렀기에 '상남자' 취급을 받는다. 순위를 매긴다고 치면 가장 밑은 선거를 치르지 않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은 활동하는 것이 다르다. 지역구 의원들은 재선과 직결되는 자신을 뽑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의제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왜 늘려야 하는지는 변호사 인력 시장의 논리와 같다고 생각한다. 변호사가 과잉공급 되면 시장논리에 따라, 하나도 없던 곳에 변호사 사무실이 차려진다. 이와 같이 의원도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이다. 시민단체 쪽에서도 상당기간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는데,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에서도 학계와 더불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때문에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여야의 속내는 늘렸으면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질문3 와일드카드가 영남, 호남으로 1장씩 가는 것을 예상하셨는데 반대로 충청이 2장 갖든지 혹은 충청 1장, 강원 1장씩 갖는 가능성은 없는지요?

선거구획정 기준에서 현재는 인구 기준으로만 했는데 이에 반발하는 의견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선거 비용을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이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지요?

선거구획정위가 다시 국회로 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요?

답변 첫 번째 질문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인 지역과 면적을 고려하자는 것은 일부 농촌 지역 의원들의 주장인데, 말이 안 된다. 나무나 숲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표하는 인구 비례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양원제를 해야 한다. 사람 숫자에 비례해 선거구를 만들기 때문에 선거구가 넓어지는 것이 문제이지만 어쩔 수 없다. 지난 선거 때 보면 경북 영천시가 10만 명이 아슬아슬하게 되어 선거구가 하나 되었고, 강남은 값이 33만 명이었다. 33만 명에서 한 명을 뽑는 것과 10만 명에서 한 명을 뽑는 것은 값어치가 3:1을 벗어난다. 이것이 헌법 재판소의 취지였다.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6:1까지도 있었고, 많이 줄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아마 1:1을 지향하도록 할 것인데, 앞서 설명한 여러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1:1, 1.1:1 정도로 한다. 따라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역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

수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선거운동이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지고 개선되었다. 지금 추세가 선거운동을 가능한 한 자유화 하면서, 돈에 관한 부분만 통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즉 말은 풀고 돈은 묶는 것이다. 도시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예비 후보들이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는 것보다 조용한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기회의 공평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예비후보제고 이렇게 되면 예비후보제가 제 기능과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국회에서 직접 할 일을 간접적으로 하면서 훨씬 복잡해졌다. 이런 방식이라면 헌정사상 첫 독립기구라는 의미가 없다. 모양만 국회에서 독립되었지만 내용물은 독립이 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질문4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되어있다. 그런 제도나 외국제도 등을 참조해 선거구 획정도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지요?

답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선진화법에서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넣었다. 국회가 이러저러한 일로 시한에 쫓겨 법정 기한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부실결산, 부실심사가 관행화되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부의제도가 도입되었다.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다. 정해놓으면 되는 데 안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입법의 문제다.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하며, 적어도 시한은 지키는 게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공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선거구 획정이 2월 13일에 이뤄진다면 두 달 남았다. 그럼 공천은 2~3월 사이에 될 것이다. 선거구가 확정 돼야 공천이 될 텐데 현실은 한 달 전에도 공천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천기한을 정당법에 정해야 한다. 6개월 전까지 공천을 끝내고, 만약 공천을 못하면 국고 보조금 감액 등의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 6개월 전까지 공천이 되려면 그 전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과 공천은 모두 서로 연동 되어있다. 우리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좀 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로 성숙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해진 것을 정해진 때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부터 왜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선거구 획정과 공천시한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질문5 의원 정수를 늘려 경쟁을 통해 양질의 의원들을 만들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고, 효율을 이끌어내는 것을 결국 국회가 선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중대선거구제인지, 아니면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요?

답변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국회는 효율적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대표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투어야 하는 곳이므로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다. 행정부의 전문

성을 국회가 따라갈 수 없다. 지금은 많이 늘어서, 의원 한 명당 9명까지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의원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데 의원들은 generalist지, specialist가 많지 않다. 의원은 선출직이라 그러하며, 보좌진들이 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맞다. 중대선거구제는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선거제도이고, 가장 좋지 않은 선거제도라고 이미 경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결론이 난 제도이다.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의미가 없는 제도다. 증원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보다는 비례대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비례성이 상당히 낮게 되어있다. 예를 하나 들면, 2004년 총선 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서울에서 한나라당보다 득표율이 1.5% 포인트 높은 18만 2000표를 얻었다. 그런데 의석은 32대 16이었다. 득표율은 1.5% 포인트 차이에 불과한데 의석은 50% 차이가 났다. 이것은 상당한 사표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 비례대표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는 이익이 충돌하는 곳이므로 싸워야 하며 정당도 싸우라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싸움을 안 하고 있으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효율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효과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